<총평>

1.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 법과정치 10문제, 경제 5문제, 사회문화 5문제가 출제되어 과목별 출제비율은 작년과 동일하였다.

2. 과목별 난이도와 경향

(1) 법과정치

- 7번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출제하였는데, 아베의 '침략 개념'에 대한 논쟁을 반영하여 시사적인 내용도 묻고 있다.
- 미성년자의 연령, 근대 시민혁명,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형태 변화 등이 출제되었는데,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 정도였다.

(2) 사회문화

- 작년 국가직에서 출제한 부분도 다시 출제되었고
- 가족과 가구의 표가 출제되어 표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하 정도였다.

(3) 경제

- 조세의 전가, 수익률, 변화율 등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었다.
- 환율, 경쟁 시장의 종류 등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다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

3. 향후 공부 전략

- ① 중요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 ② 표, 비율, 변화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출 문제를 통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 ③ 공부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때 그 때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자.

1. 사회문화 4단원 불평등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

[해설] 정답①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이다.

- ① (○) 갑은 기능론이고, 기능론은 사회적 기여 정도(능력)에 따라 차등적 분배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서열화라는 계층 불평등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② (×) 계층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는 것은 갈등론인 을의 입장이다.
- ③ (×) 을의 갈등론의 입장에서선 귀속적 요인이 대물림을 초래한다고 본다. 계층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④ (×)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인 갑의 입장이다.

2. 사회문화 1단원 연구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해설] 정답①

(가)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 (나)는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이다.

- ㄱ. (○) (가)의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여야 하고, 가설을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설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 반면 (나)는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감정 이입,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 ㄴ. (○) (가)는 양적 연구로서, 보편적 법칙 발견을 중시하고, (나)는 질적 연구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다.
- ㄷ. (×) 가설 설정은 (가)에서 중시한다.
- ㄹ. (×)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 연구로 (가)이고,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 연구로 (나)이다.

3. 사회문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정답②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이다.

- ① (○) 갑은 사회 명목론으로 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② (×) 을은 사회 실재론으로,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 본다. 사회를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보는 입장은 사회 명목론인 갑이다.
- ③ (○) 갑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으로,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④ (○) 을은 사회 실재론으로, 개인은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4. 사회문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표

[해설] 정답④

- ① (×) 확대가족은 부부와 기혼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이상의 가족이다. 기타 가구 안에 4세대 이상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가구도 확대 가족이기 때문에 2세대 확대가족과 3세대 확대가족만의 수치로 확대가족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 ② (×) 핵가족에는 부부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와 미혼자녀의 수치만 계산해서는 안된다.
- ③ (×) 1990년의 경우에는 핵가족의 비율이 76.7%이기 때문에 확대가족 수보다 핵가족 수가 더 많다.
- ④ (○) 2010년의 경우 A지역의 1세대 핵가족(부부가구)의 수는 10000(천) 가구의 11.8%이기 때문에 1180가구이고, B지역의 핵가족의 수는 2500(천)가구의 14.2%이기 때문에 355가구이다. 따라서 B지역의 1세대 핵가족의 수가 더 적다.

5. 사회문화 일탈행동론

[해설] 정답②

(가)는 낙인이론이고, (나)는 수단을 잘못 사용한 머튼의 아노미론이다. 성적을 잘 받는 것을 허용된 문화적 목표이지만, 수단을 잘못 사용한 사례이다.

- ㄱ. (○) 낙인이론은 어떤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탈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ㄴ. (×) 낙인이론은 일탈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지 않고,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의미 규정에서 찾는다.
- ㄷ. (○) (나)는 머튼의 아노미론이다. 맞는 지문이다.
- ㄹ. (×) (가)의 낙인이론은 미시적 관점, (나)의 아노미론은 거시적 관점이다.

6. 법과정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해설] 정답③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때, 그 개인은 국가에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법과정치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

[해설] 정답②

- ① (○)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권도 조약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 유엔은 결의를 통해 침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결의에서는 어떤 한

나라의 주권·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또는 국제연합헌장과 상충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는 무력행사를 침략으로 규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규범력을 부인하였다.

③ ④ (○) 특히 침략적 전쟁만을 부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어적 전쟁은 할 수 있다.

8. 법과정치 미성년자의 법률적 보호

[해설] 정답④

① (○) 혼인 적령은 만 18세이고, 18세의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법률혼을 할 수 있다.

② (○) 형법에 의하면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③ (○)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④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이다. 따라서 19세의 대학생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9. 법과정치 제조물 책임법

[해설] 정답③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③ (×) 제조물의 결함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측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 다만,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한다.

10. 법과정치 알권리

[해설] 정답①

① (×) 알권리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다. 다만, 언론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알권리를 도출한다.

②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나 개인 모두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가 적용된다.

11. 법과정치 근대 시민 혁명

[해설] 정답④

(가)는 영국의 명예혁명,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 (다)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다.

ㄱ.(×)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

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자연권 사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ㄷ.(○)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라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ㄹ.(○) 프랑스 시민 혁명 이후 '인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12. 법과정치 직접 민주적 제도

[해설] 정답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적 요소는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정책안이나 헌법안을 발의하는 국민 발안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13. 법과정치 헌법 개정 변천

[해설] 정답②

- ① (×) 1952년 1차 개헌은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다.
- ② (○) 5차 개헌 때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 ③ (×) 7차 개헌 때는 임기 6년만 규정되어 있었고, 연임과 중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3선을 할 수도 있지만, 2차 개헌시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허용이 있었고 6차 개헌을 통해 3선을 할 수도 있었다.
- ④ (×) 9차 개헌은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환원한 것이었다.

14. 법과정치 이스턴의 정치체제 모형

[해설] 정답①

㉠은 투입, ㉡은 산출이다.

- ㄱ. (○)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시민의 요구가 들어가는 투입이다.
- ㄴ. (○)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에서는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 ㄷ. (×) ㉡은 산출로써, 주로 행정부가 담당한다.
- ㄹ. (×) ㉡은 환류로써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환류의 기능이 억압을 받는다.

15. 법과정치 선거제도

[해설] 정답③

1인 1표에서 1인 2표를 바꾼 것은 1인1표에서 나타난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위배 때문이다. 1인2표를 함으로써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부합하려고 하였다.

- ①(×) 1인 2표제는 오히려 소수파에 유리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정당투표를 따로 한다고 해서 정당 자체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1인 2표제는 정당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선거 원칙에 더 충실해졌다.
- ④(×) 1인 2표제로 전환하였어도, 정당만 선택할 수 있지 명부의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다.

16. 경제 경쟁형태에 따른 시장의 종류

[해설] 정답③

A는 독점시장, B는 과점시장, C는 독점적 경쟁시장, D는 완전경쟁시장이다.

- ①(×) 담합이나 카르텔은 B 과점시장에서 나타난다.
- ②(×) 과점시장에서도 대체재는 존재한다.
- ③(○)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D인 완전경쟁시장이다.
- ④(×) D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은 가격 순응자여야 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7. 경제 수요와 공급, 대체재, 조세의 전가

[해설] 정답④

- ①(×) 균형가격은 1000원, 균형 거래량은 180개이다.
-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려면, 수요량도 240개이어야 한다. 가격이 1600원 일 때에는 수요량은 150개 밖에 되지 않아서, 240개를 팔 수가 없다.
- ③(×)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도 감소한다. 따라서 X재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1000원보다 아래에서 형성된다.
- ④(○) 공급자한테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상승한다. 이 때, 균형가격 1000원에서 600원이 올라서 새로운 균형가격이 1600원이 되지는 않는다.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균형가격은 1400원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1400원에서는 거래량이 160개 되어, 이전의 180개에서 20개가 하락한다.

18. 경제 합리적 선택

[해설] 정답②

A프로젝트 : 200만원 투자, 수익률 9%로 18만원 수익 발생

B프로젝트 : 400만원 투자(그 중 200만원은 연리 5%로 대출받음, 따라서 10만원의 비용 발생)

따라서 B프로젝트를 선택하려면, 적어도 28만원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400만원 중 수익이 28만보다 많으려면, 수익률이 적어도 7%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서 ④의 7.1%가 정답이다.

19. 경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물가상승률

[해설] 정답④

- ①(×) 실업률은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으로 구한다.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실업자 수를 비교할 수가 없다.
- ②(×) [명목GDP증가율=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 물가상승률] 이다. A국은 9.5%, B국

은 11.4%, C국은 8.1%이다. 따라서 B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만으로는 증가액을 알 수는 없다.

④(○)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경제성장률-인구증가율 이다. 따라서 A국과 C국은 (-)의 값이고, B국이 (+)의 값이다. B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 경제 환율의 변화

[해설] 정답③

수출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는 약세이고 달러는 강세가 된다.

①(×)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은 커진다.

②(×) 원화가 약세이면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은 커진다.

③(○) 원화가 약해지면, 유학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그 부담이 커진다.

④(×)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로 임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